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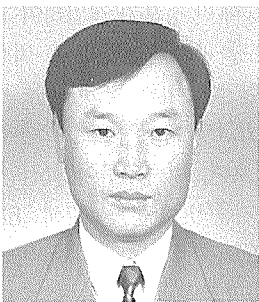
**지**난 80년대말부터 그 파고가 높아진 자유화, 개방화, 국제화의 물결이 정보화시대라는 말과 함께 홍수처럼 밀려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의 입과 귀를 통해 말하고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제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진 인생을 살

늘을 살고있다.

필자 역시 같은 입장에 처해 있음을 느끼면서 정유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써 국내경제의 자유화,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석유산업에서도 일고 있는 자유화 논의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석유산업의 경우 지난 '88년부터 자유화논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이래 그간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자유화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제까지 정부가 직접 규제해온 석유가격을 자유화함과 동시에 생산, 유통부문의 신규참입 자유화, 석유수출입 자유화 등 석유산업 전반에 대한 자유화를 시행한다는 원칙하에 그 검토와 준비작업을 수행해오고 있고, 정유사를 비롯한 관련업계 역시 자유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몰두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석유산업 자유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日本 등 아·태 3국과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의 석유산업과 유가제도를 조사키로 하고 정부, 연구소 및 업계 관계자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7월 14일~7월 24일(A팀과) 7월 27일~8월 7일(B팀)간 두차례에 걸쳐 연구조사를 마쳤으며, 필자는 B팀의 일원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하여 이들 국가의

# 유럽 4개국의 석유산업에 대한 해외출장을 마치고



박준길  
(유공 업무1과장)

고 있구나]하는 느낌까지 드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우선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정, 회사, 지역 등등) 내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와 개혁에 대해 가장 촉각을 세워 인지하여 이를 수용하거나 때로는 거부하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살펴 보고 미래를 구상하고 있으며, 때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로 그 관심의 폭을 확대시켜 가면서 오

석유산업을 일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조사단 참가를 통해 유럽 4개국의 경우는 한마디로 석유산업에서의 모든 기능이 전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수행됨에 따라 수급조절은 물론 가격결정 등이 모두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기능(*free market force*)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는 비단

경제가 태동되어 수세기에 걸쳐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에 대응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하여 성숙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산업의 발달사가 일천한 우리와는 너무도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국경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국제경쟁현실속에서 생존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렇듯 「무한전쟁」이라는 시대

유화 추이 및 경험을 살펴보면, 프랑스 정부는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운용되고 결정되어야 하고, 비상시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인 프랑스석유회사의 국제화, 프랑스 국적선단의 유지 등 석유의 안정공급확보를 위한 기본능력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걸프사태



영국 통산 산업성(DTI)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석유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부문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제 운용기조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석유산업을 포함한 산업전반에 걸쳐 정부가 깊이 개입하여 규제와 보호의 양면정책을 시행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근본적이며 광범위한 범위에서 대비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 경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발원되고 자본주의

적 현실을 맞고 있는 지금, 국내 석유산업의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자유화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그려보면서, 금번 출장을 통해 파악한 유럽 4개국의 석유산업과 유가제도 현황을 개략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 1. 프랑스의 석유산업

우선 프랑스의 석유정책과 유가자

기간중에만 정부가 개입하여 최고가격제도를 실시한 바 있고, 비상시를 대비한 석유비축 및 비축유 방출정책은 IEA의 비상시 프로그램에 따르고 있으며, 비축의무이행(전년도 수입량 기준 90일분)을 위해 '88년에 SAGESS를 설립하여 정부 비축유관리 및 민간 비축대행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75년 이전까지는

매년 석유수요가 7~10%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공급능력확보를 위한 통제 필요성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었으나, '75년 이후 경기불황, 에너지소비 절약, 핵개발 등으로 석유소비 감소에 따른 구조개편 필요성과 EC에서의 자유화요구에 따라 점진적인 가격자유화가 진행되어 '86년에 완결되었으며, 이 기간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지정하는 가격밴드제를 실시하여 점차 가격변동 가능폭을 넓혀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실제가격이 최고가격 이하인 상태에서 가격을 완전자유화하였는 바, 고시가격 변동가능폭의 확대외에 자유화를 위한 특별한 보완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가격자유화 실시이후 1~2년간은 국내 석유수요가 정체 내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어 석유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한 주유소 마진감소로 자유화이전 4만개를 넘던 주유소가 23,000여개로 대폭 감소하였고, 주유소의 대형화현상 등이 나타났다.

가격자유화로 인해 국내가격수준이 종전 고시가격에서 현물시장 가격으로 하락한 것과 관련하여, 정유사의 경우 이미 시설투자를 한지 오래되어 감각상각도 거의 끝난 상태임에 따라 고정비 등으로 인한 부담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정부관계자는 대체적으로 가격자유화로 인해 큰 부작용은 없

었으나, 가격자유화 이전에 석유수출입을 먼저 자유화함으로써 수입사 및 대형유통업자(Hypermarket)가 직수입 판매에 따른 이윤증가를 무기로 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유발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잘못이었음을 지적하고, 가격과 수출입 자유화는 동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석유수급에 있어서는 1차 에너지 중 석유의존도는 약 40%로써 석유제품수요중 약 75%를 국내에서 정

**프랑스는  
가격자유화에 앞서  
수출입자유화를 먼저 실시하여  
직수입판매마진을 이용한  
수입사 및 대형유통업자의  
과당경쟁을 유발했다.**

제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원유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80년대 이후 석유수급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다.

국내 정제능력 측면에서는 내국기업인 Total, Elf 2개 정유사의 비중이 49%, 외국계 Major가 42%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수요(내수)는 '93년의 경우 1,756천 B/D로 우리나라(1,546천 B/D)의 1.14배 정도이며, 수요구조 측면에서는 수

송용 유류인 휘발유 및 경유의 비중이 각각 20.4%, 48.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free market force)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판매가격은 로테르담 현물시장의 제품가격에 수송비, 세금, 마진 등 추가비용을 더한 수준으로 이같은 가격의 결정은 Total, Esso 등 메이저와 소수의 대형유통업자(Hypermarket)에 의해 주도되어 공장도 가격은 매일 변동되며, 주유소에서의 판매가격은 주 2~3회 정도 변동되고 있다.

유통부문 역시 가격과 마찬가지로 자유화되어 있으므로 유통에 관한 특별한 제도나 정책은 없으며, 주유소는 약 23,000여개로써 정유사계열, Hypermarket 계열(약 20%) 및 독립주유소(3~4%)로 나뉘고 전체 주유소중 약 45%가 Self-Service 주유소이며, 이중 대형 슈퍼마켓인 Hypermarket 계열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판매가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등 신장세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Hypermarket 주유소의 경우 관리비절감 등으로 가격이 낮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프랑스에서 Hypermarket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가격자유화에 앞서 수입을 자유화함으로써 Hypermarket들이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던데다가 Pipe-Line 이 정유사소유가 아니고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 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국에 비해 땅값이 싸고 비도시지역이 많아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Hypermarket* 형태의 영업에 유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영국의 석유산업

영국의 석유정책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여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없으며, 다만, 석유산업과 관련된 정책관심분야로서 환경보전(Enviornment)을 위한 CO<sub>2</sub> 배출규제, 경쟁촉진(Competition), 안정성확보(Security) 등 3가지 측면이 고려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CO<sub>2</sub> 배출규제로서는 CO<sub>2</sub> 배출을 '90년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세금을 '97년까지 매년 5%씩 인상할 예정이며, 공정한 경쟁촉진을 위해 4~5년을 주기로 산업에 대한 경쟁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바, 가장 최근에 있었던 '91년의 조사 당시 석유시장이 경쟁적 즉, 경쟁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영국은 산유국으로서 석유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으므로 전년도 순수입량의 90일분 비축을 의무로 하는 IEA 규정상으로는 비축의무가 없으나, EU(유럽연합)에서 전년도 소비량기준으로 90일분의 비축을 요구함에 따라 안정성확보 측면에서 일정분의 석유비축을 유지토록 하고

있는 바, 정유사에게는 76.5일, 비정유사(*Hypermarket*, 독립계유통업자 등)에게는 66일의 비축의무와 함께 매월말 재고를 기준으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1~2년에 한번씩 실사가 행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영국 정부관계자는 국제석유시장의 불안고조 내지 사태발

생 등 비상시에는 IEA 회원국간의 공동대처로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과 에너지부문의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교환 등이 IEA 회원국으로서의 Merit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업계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상류부문이 미미하고 메이저가 없으며, 비상시 IEA 등 국제기구로부터 안정공급보장이 미약한 상황에서 가격 등 석유산업 전반을 자유화하려는 경우,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석유수급에 있어서는 1차 에너지 중 석유의존도가 약 39%이며, 북해 유전에서 연간 약 7.3억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여 이중 약 4.7억배럴을 수출하는 산유국이나, 중동산 원유를 약 4.5억배럴을 수입하여 Crac-

**영국의  
석유가격은 로테르담 가격에  
연동하여 정유사가 주도적으로  
결정. 정부의 정책관심은  
환경규제, 경쟁촉진, 안정성  
확보에 치중한다.**



네덜란드 고속도로변 주유소에서 필자가 직접 주유하고 있다. (Self-Service식 주유소)

king하여 사용하므로 원유의 순수출 규모는 약 0.2억배럴에 불과한 대신 제품의 순수출이 약 1.1억배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석유수급은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으며, 국내정제능력 중 내국계 메이저인 BP와 Shell의 비중이 27%, Esso, Mobil, Texaco, Elf 등 외국계 메이저의 비중이 40% 씩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국내수요(내수)는 '93년의 경우 1,569천B/D로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수요증가가 거의 없는 정체상태에 있으며, 수요구조 측면에서는 역시 휘발유(30.8%), 경유(26.8%) 등 수송용 유류의 비중이 높다.

석유가격현황을 살펴보면 '75. 5월 이후 대차수상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따라 정부의 가격규제가 철폐되었으며, 다만, 비상시 정부개입 권한만을 유보시키고 있음에 따라 석유가격은 전적으로 시장기능(free market force)에 맡겨져 있어 실제 국내판매가격은 로테르담 현물 시장의 제품가격에 따라 변동되며 가격의 결정은 정유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정유사가 주유소 및 산업체 판매가격에 관한 스케줄을 발행하며, 고객에 대한 가격은 이 스케줄을 참고로 거래규모, 위치 및 구매력 등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한편, Hypermarket 등 정유사가 아닌 독립계 유통업자를 통해 공급되는 제품의 가격은 정유사 가격보

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통부문의 경우 안전관리, 제품취급, 가격표시 및 품질관련사항 이외에는 정부규제가 없는 바, 주유소는 '70년대 이후 유통시장에서의 경쟁격화로 그 수가 감소(특히, 소형주유소가 많이 폐업함)되어 현재는 약 18,000여개로 지금도 매년 500여개씩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유소의 신설은 지방정부가 관리(주민동의서필요)하고 있으나, 매우

### 독일은 수급 및 가격정책에 있어 자유화를 견지했다. 그 결과 두차례 석유위기사 공급상의 문제점 없었다.

드문 편으로 신규의 경우 대부분 대형으로 건설되고 있다.

또한, 주유소는 정유사계열(약 80%), Hypermarket 계열 및 독립주유소계열로 나뉘어 있고 이중 6,700여개(약 37%)가 정유사(Major)소유이며, 정유사와 주유소 간계약기간은 1~5년으로 대형주유소는 5년 정도이고 소형일수록 계약기간이 짧으며, 상표표시(Pole-sign)의 경우 그 회사제품만 팔도록 법적규제가 있으나, 윤활유 등 기타 상품

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유소의 판매가격면에서는 Hypermarket 계열주유소가 판매물량도 많고, 유의상품의 판매에 따른 영업비용 절감 등으로 가장 싼 편이다.

### 3. 독일의 석유산업

우선 석유정책에서 독일정부는 자유경쟁시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내국/외국계 기업에 대해 전혀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평상시 정부가 규제한다고 해서 석유위기사에 달라질게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공급국과의 우호유지, IEA, EU 가맹국과의 협조 등을 통한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EBV(석유비축협회)를 통해 비축물량을 관리하고 있는 바, 현 비축량은 국내 수요의 120일분을 유지하고 있다.

석유수급의 경우 1차 에너지중 석유의존도는 약 40%로 소요원유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공급중 국내정제비율은 약 65%로써 2차 대전 이후 정부의 시장기능 활성화정책 시행에 따라 석유수급은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어 국내수급에서 외국계 Major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장점유율 70%, 정제생산비중 60%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수요(내수)는 '93년의 경우 2,771천B/D로 우리나라의 1.8배

수준이며, 수요 구조에서는 휘발유, 경유의 구성비가 각각 23.5%, 47.7%로 매우 높다.

수급과 마찬가지로 석유가격 역시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져서 로테르담 현물시장 가격에 연동되어 메이저에 의해 가격의 결정 및 변동이 주도되고 있다.

가격자유화와 관련하여 정부관계자는 정부에 의한 가격결정은 오히려 국제시장 변동에 충분히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인상시 정부가 비난을 받게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그 실례로서 1, 2차 석유위기시 독일의 국내 유가가 급등했지만 공급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정부가 가격을 규제한 다른 나라들은 고시가격의 비신축성 때문에 공급부족을 겪었음을 지적하였다.

독일의 국내 유통시장은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외국계 메이저가 약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도 매우 낮아서 소형주유소들의 폐업사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일의 경우, 프랑스와는 달리 *Hypermarket* 계열 주유소의 비중이 미약한데, 이는 독일이 도시위주로 되어 있어 땅값이 비쌌에 따라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Hypermarket* 형태의 영업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 4. 네덜란드의 석유산업

네덜란드 정부의 석유산업에 대한 가격규제추이를 보면 '72년까지는 *Price Law*에 의해 산업전반에 대한 가격의 직접 규제가 행해지다가 '72년 이후 석유위기로 인해 석유가격에 대한 특별한 규제필요성으로 '82년까지 *Price Maximum System*을 도입·시행하였으며, '82년 이후 국

네덜란드는  
자유화초기 심한 경쟁으로  
가격하락후 1년만에 안정을  
회복하였다.  
현재 도로변 주유소 20km  
거리제한이 상존하고 있다.

내 경제성장과 석유수요의 안정에 따라 유가자유화가 이루어져 지금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이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다.

또한, 정부는 석유 의존도 감축을 위해 발전성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CO_2$  배출량 감축, 에너지절약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석유위기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IEA* 체제내에서의 공동대응원칙하에 90일분 비축의 무달성을 위해 정유사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입량의 50일분 비축의무를, 정유사에 대해서는 16과 2/3일분 비축의무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의 석유비축량은 정부비축까지 포함하여 약 140일분이 유지되고 있으며, 비축량의 70%를 석유비축기구인 *COVA*가 관리하고, 나머지 30%는 민간이 관리토록 운영하고 있는바, 위기발생시 *COVA*의 비축유 방출지도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고, 민간비축분은 *IEA*에 의한 긴급분배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석유수급에 있어 1차 에너지중 석유의존도는 약 46%로 소요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후 약 70%를 제품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 유럽지역의 석유거래 및 가격의 중심이 되는 로테르담 현물시장이 있어 제품 수출입이 많다. 석유수급은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으며, 국내 정유사는 5개사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국내정제시설중 약 24%는 외국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다.

국내수요(내수)는 '93년의 경우 425천 B/D로 우리나라의 1/4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며, 주로 수송용과 석유화학용으로 사용되고 산업부문에서의 석유소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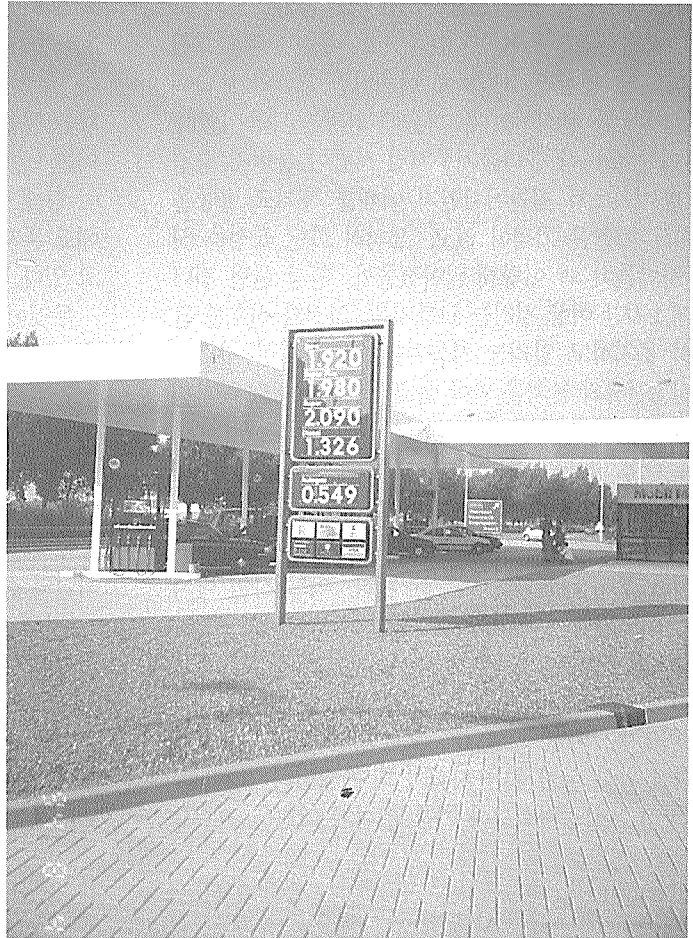
석유가격은 국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규제 철폐에 따라 '82년에 자유화되어 자유화 초기에는 심한 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되었다가

약 1년후 안정되었으며, 그외에 유가 자유화로 인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국내가격은 앞서 3개국과 마찬가지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며, 그 수준은 로테르담 현물시장가격에 세금, 마진 등 추가비용을 가산한 수준으로 메이저가 가격 주도권을 갖고 있다.

유통구조는 정유사계열, *Hyper-market* 계열, 독립주유소계열로 나뉘어 있으며, 유통부문에서의 가장 중요한 규제는 도로변 주유소에 대한 설치규제로서 도로변 주유소 신설시 20km를 이격토록 하고 있는 바, 도로변 주유소는 가격이 높고 판매량도 많아 수익성이 양호하여 모두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4개국은 공통적으로 비상시에 대비한 *Security* 확보차원에서 비축관련 제도를 운용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정부가 석유산업에 개입하지 않는 말 그대로 「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태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모든 것이 조절되고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그동안 필자가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직접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방문대상 정부 및 업계 관계자와의 면담시마다 느꼈던 공통적 현상 즉, 「석유가격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같이 「석유가격은 정부, 기업



네덜란드의 고속도로변 주유소의 가격 표시판.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르다.

어느누구도 아니고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될 뿐이며, 이렇듯 너무도 당연한 것을 질문하는 것은 산업의 성장배경과 과정의 차이로 인해 우리와 “사고의 차원(*dimension*)내지 철학”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는 답변에서 당장 가슴에 와닿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메시지를 느끼게 되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이든 필연적 과

정이든간에 국내 석유산업도 자유화의 길목에서 그 방향을 잡으려는 시점에서 서 있는 바, 우리 경제와 그속에서의 석유산업의 실상을 면밀히 진단하여 장기적으로 석유소비자의 이익 및 석유업계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자유화 플랜」의 마련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